

문 1. 다음 중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관치형 지방행정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.
- ②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.
- ③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.
- ④ 자치행정방식은 간접행정방식에 해당한다.
- ⑤ 중앙정부에서 국토관리, 환경관리, 중소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일선집행기관을 설치해 처리하는 행정도 지방행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문 2. 다음 중 미국의 헌장제정 방식 중 자치헌장(home-rule charter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(州)의회가 개별 지방정부마다 그에 맞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제정·부여하는 방식이다.
- ② 모든 지방정부에 같은 내용의 헌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.
- ③ 헌장을 인구규모별로 나누어 제정하는 방식이다.
- ④ 지역사회에서 만든 헌장(안)을 주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.
- ⑤ 지방정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.

문 3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대립형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?

- ①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.
- ②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의 마찰로 인한 행정의 낭비나 지연이 없어 행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
- ③ 의원들이 직접 행정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.
- ④ 여러 의원들이 의사를 모아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신중을 기할 수 있다.
- ⑤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.

정답 및 해설

- 1. ③
· 지방행정의 수행방식은 자치행정, 관치행정, 위임행정으로 세 가지 방식
- 2. ④
· 선지 ①은 특별헌장제도에 관한 설명, 선지②는 일반헌장제도, 선지 ③은 분류헌장제도에 관한 설명
- 3. ①
· 선지 ②~④는 기관통합형의 장점
· 기관대립형에서 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인기에 편승한 단기적인 정책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음.

문 4.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이 없는 것은?

- ① 사회·경제적 변화로 인해 행정구역과 실질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.
- ② 다단계 행정계층 구조로 인해 상·하계층간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.
-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은 물론 인구와 면적 등의 격차가 심해서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.
- ④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각 자치구 간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자치구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조정의 어려움도 존재한다.
- ⑤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도와 군의 구역은 너무 넓어서 생활의 불편과 참여의 저조라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.

문 5.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교육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.
- ② 교육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.
- ③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다.
- ④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.
- ⑤ 기초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.

문 6.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를 처리한다.
- ② 지방의회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실시한다.
- ⑤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- 4. ②
· 상·하 계층간의 의사전달의 왜곡현상은 다단계 자치계층의 문제
- 5. ③
· 우리나라 지방선거구제는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(1인), 기초의회선거는 중선거구제(2~4인)를 채택하고 있음.
* 교육의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번만 치러진 후 제 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폐지됨.
- 6. ⑤
·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: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문 7.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달부터 개시된다.
- ②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.
- ③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.

문 8.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이 임명한다.
- ② 읍장·면장·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.
- ③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.
- 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문 9. 다음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가운데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계층의 소비자에게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액수로 표시된 권리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은 무엇인가?

- ① 민간위탁(contracting-out) 방식
- ② 보조금(subsidy)지급방식
- ③ 증서(vouchers)제공 방식
- ④ 지정(franchises) 방식
- ⑤ 자발조직(voluntary organization)에 의한 방식

정답 및 해설

- 7. ①
· 공직선거법 제14조 제2항: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.
- 8. ④
· 제91조 제2항: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
- 9. ③
· 바우처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

문 10.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.
- ② 개별법 우선 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.
- ③ 조례로써 독자적인 지방세의 세목 신설이 가능하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 권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.
- ⑤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한다.

문 11. 광역행정의 방식 중 연합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복합사무조합 ② 일부사무조합 ③ 사무위탁
- ④ 공동기관 ⑤ 연합회의

문 12. 다음 중 지방행정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공무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.
- ② 정치적 책임은 주민의 의사에 충실히 대응하였는가를 반영한다.
- ③ 지방행정책임은 행정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동기를 중시한다.
- ④ 직업적 책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윤리에 따르는 직책수행과 관련이 있다.
- ⑤ 지방행정책임은 주민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0. ⑤

- 자치사법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.
- 개별법 우선적용 원칙으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제약을 받음.
- 조세법률주의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신설은 불가능
-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의 권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.
- 지방자치법 제22조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11. ①

- 연합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합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광역행정에 관한 사무를 그 연합단체가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시공동체, 자치단체연합체, 복합사무조합 등이 있음.

12. ③

-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과정에 대한 책임을 중시함.

문 13. 다음 중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안전행정부장관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·교통·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조정한다.
-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.
-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(敍勳)의 추천은 「상훈법」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.
-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8조 제1항·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,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.

문 14. 다음 중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민세는 도와 자치구의 보통세이다.
- ② 지방세는 과세주체가 지방정부이며 재정권에 의하여 강제로 부과·징수된다.
- ③ 지방세는 응징성이 강조된다.
- ④ 지방세는 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원배분적 기능을 수행한다.
- ⑤ 서울시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하였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②

·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: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·교통·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.

※ 2021년 기준 안전행정부→행정안전부로 조직개편

14. ①

· 지방세기본법 제8조(지방자치단체의 세목)에 의하면 주민세는 시군세와 특별시·광역시세의 보통세이다.

구 분	도	시·군
특·광역시	취득세, 레저세, 지방소비세	주민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
구	등록면허세	재산세

문 15.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인도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② 한정치산자·금치산자는 주민이 될 수 없다.
- ③ 주민은 오직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뿐이다.
- ④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주민은 참정권의 주체로서의 공민(公民)과 같은 개념이다.

문 16. 다음 중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재정자립도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를 반영하고 있다.
-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구조·세출구조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.
- ③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을 자주재원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④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.
- 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채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①

·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도 주민이 될 수 있음.
 · 시·군·자치구의 주민은 동시에 시·도의 주민이 됨.
 ·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
 ·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'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'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일정한 연령 요건 등 참정권의 주체로의 공민과는 구별됨.

16. ⑤

· 재정자립도는 비율을 나타내므로 총재정규모는 알 수 없음.
 ·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심으로 산정
 · 지방채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자주재원에 포함
 · 총세입 대비 자주재원 성격만을 고려하고 있음.

- 문 17. 다음 중 우리나라 주민소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유권자 1/3 이상이 투표하고 2/3 이상이 찬성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임이 확정된다.
 - ②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.
 - ③ 유권자의 10%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·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2005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.
 - 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5%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.

- 문 18. 아른스타인(Arnstein)의 참여단계론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?
- ① 교정단계(therapy)
 - ② 정보제공단계(informing)
 - ③ 유화단계(placation)
 - ④ 계도단계(manipulation)
 - ⑤ 의견수렴단계(consultation)

- 문 19. 다음 중 현행법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로 규정된 것은?
-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
 - ③ 자동차세 ④ 레저세
 - ⑤ 지역자원시설세
- 문 20. 지방선거에서 중·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와 상관이 없는 것은?
- ① 소지역 중심의 정치적 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다.
 - ②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용이하여,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.
 - ③ 조직기반이 강한 지역정치인보다는 정책지향성이 높은 유능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.
 - ④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의 후보들을 당선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.
 - ⑤ 특정 지역이 아닌,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②
-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: 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(이하 "주민소환투표권자"라 한다)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 -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2: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
 - 2006년 5월 24일에 제정되어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
 -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3: 지역선거구시·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: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
18. ④
- 계도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교육·설명·계도·지시·전달을 할 뿐이고 주민들은 단지 참석만 하는 형태
 - 아른슈타인이 분류한 주민참여
 1. 비참여: 조작(계도)(Manipulation) < 임시치료(교정, Therapy)
 2. 형식적 참여: 정보제공(Informing) < 상담(Consultation) < 회유(유화, Placation)
 3. 주민권력적 참여(실질적 참여): 대등협력(Partnership) < 권한 위임(Delegated power) < 자주관리(Citizen control)

정답 및 해설

19. ⑤
-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2호: 목적세
 - 가. 지역자원시설세
 - 나. 지방교육세
20. ②
- 선지 ②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설명